



SVB, 크레디스위스
파산과 금융 위기

2, 3, 4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

6면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15, 16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보안법 탄압 반대

5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15면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한일 관계

7, 8, 9, 10면



윤석열의 이중의 위기

정치 위기 금융 위기

관련 기사 2, 3, 4, 5, 6, 8, 9, 10, 13면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미국 중앙은행)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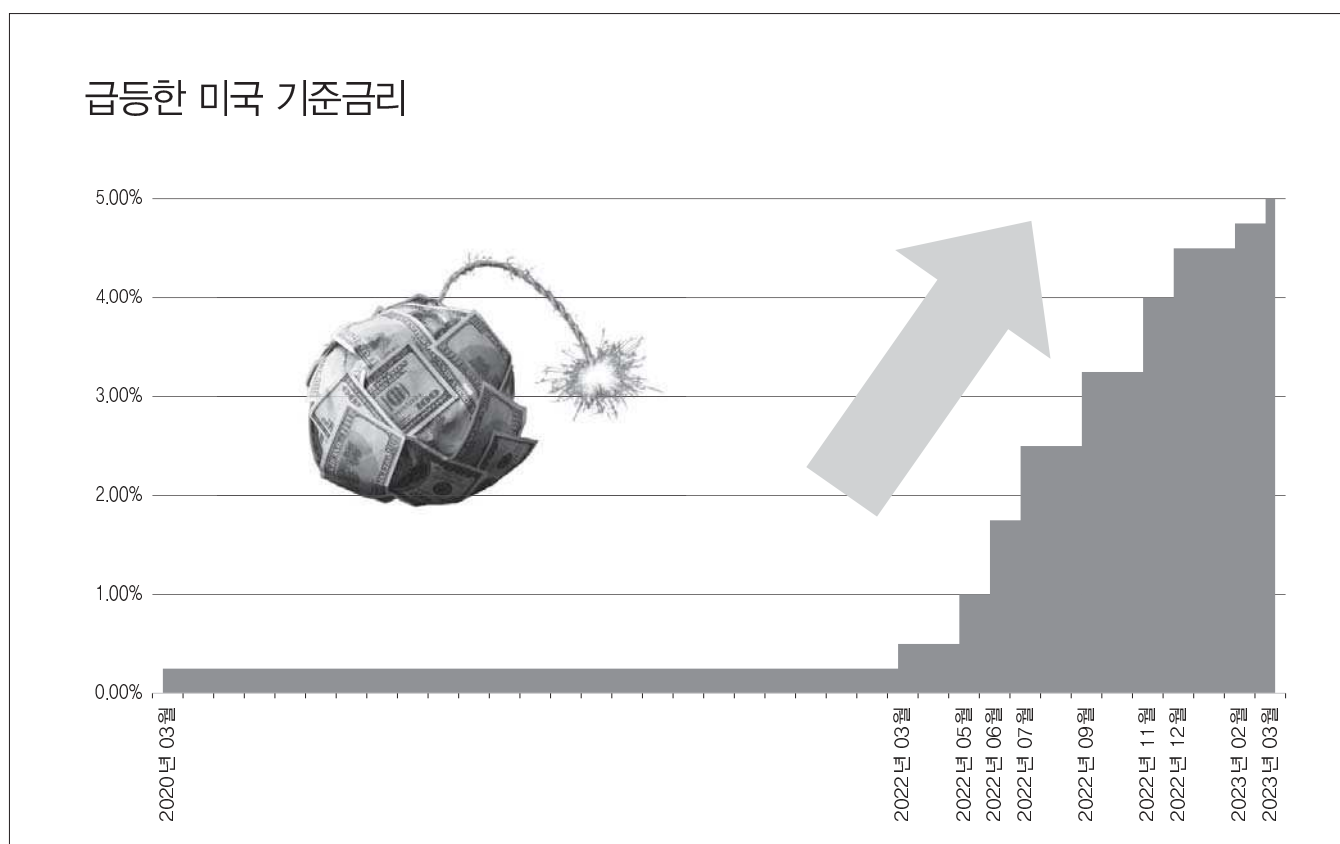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파산보다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UBS에 1000억 스위스프랑(14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과정에서 크레디스위스 주주들은 자산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됐지만, 크레디스위스가 발행한 고위험 채권(코코본드) 23조 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이 채권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주식이 하락하며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400조 원에 달하는 코코본드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은행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심각한데도 3월 22일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퍼센트에 이른다. 연준 의장 파월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려 하고,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 중앙은행도 얼마 전 금리를 0.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같은 통화량 증가 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고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 통화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물가 인상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비용 증가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며 이윤을 추구한 기업주들 때문에 벌어졌다. 올해는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원자재 가격은 다소 떨어졌지만, 그간의 원자재 가



격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시도는 계속되며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 인상의 주요 요인인 것처럼 말이다.

특히, 지배자들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투쟁을 촉발하고 이게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어느 정도 침체시켜서라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

그러나 물가 인상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돼 왔다. 미국에서도 올해 2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대비 2퍼센트가량 깎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며 은행 위기를 키우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파월은 SVB 붕괴는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SVB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은 한두 곳이 아니다.

SVB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SVB는 ‘안전 자산’이라

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지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위기에 빠졌다.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은행들의 자산 손실은 6200억 달러(약 821조 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7퍼센트에 이른다. 미국 은행 중 10퍼센트가 SVB보다 더 큰 자산 손실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위기는 단지 중소형 은행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JP모건체이스의 조사를 보면, 미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뱅크오브아메리카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 2022년에 16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SVB와 같은 수치이다(마이클 로버츠, ‘Bank busts and regulation’).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이와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 회수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업들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그러는 동안 커진 금융 거품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꺼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곳곳이 지뢰밭인 것이다.

지금 지배자들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들에 막대한 지원을 하며 구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도 보장해 주고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스위스 정부도 크레디스위스를 인수한 UBS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금리로 서민층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있다. 은행 구제자금도 파산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UBS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고도 크레디스위스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은 이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기고 있다.

정선영

용어설명

코코본드

2008년 위기 이후 만들어진 신종 자본 증권을 지칭하는 말.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서 고위험 채권으로 분류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대불황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당시 세계 금융 위기의 궁극적 원인은 낮은 이윤율이었다. 낮은 이윤율이 생산적 투자를 둔화시키고 금융 투기를 부추긴 것이다. 규제 조처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들의 대규모 파괴를 피하는 것으로, 건전한 상태로 이윤율이 회복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세계경제 시스템은 계속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의존했다. 2013년과 2018년에 금융을 “정상 상태”로 돌려 놓으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시도는 실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2007~2008년보다 더 큰 규모로 금융 시장이 경색되자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를 확대했다. 중앙은행들은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쓸 돈을 찍어 내기도 했다. 극성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지난 15년 내내 이 추가적인 통화가 물가 상승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2021~2022년 실제로 물가가 급등했을 때 그것의 주된 원인은 생산 시스템에 있었다.

팬데믹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엮어주는 공급 사슬을 교란시켰다. 가구들이 룩다운에 대응해 소비를 늘린 것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동아시아 나라들이 석탄에서 벗어나면서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설에 따라, 즉 물가 상승이 마치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인 것으로 취급해 물가 상승에 대응했다. 그에 따라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

이것은 가차없는 계급 정치[지배계급 측의 계급 정치 — 역자]를 실천한 것이었다.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억제해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이윤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세계경제는 그간 저금리로 지탱해 왔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강행 중이다

는 지난가을 당시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와 그의 재무장관 퀴지 콰팅이 감세 정책에 판돈을 걸자 영국 국채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영국 국채에 큰 돈을 투자한 많은 연기금이 붕괴 위기에 빠졌다.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도 그런 사례다. SVB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IT 기업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었다.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 벤처 자본에게서 받은 대출에 의존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렇게 대출받은 자금을 SVB에 예치했다. SVB는 이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에 대거 투자했다. 그 채권은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그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금자들은 예치한 돈을 회수했다.

영화 <멋진 인생>[2020년 12월 말에 미국에서 재개봉돼 흥행한 1946년작 영화 — 역자]에서 묘사된 1930년대 불황기의 은행권이 디지털 시대에 재현된 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SVB가 무너지자 예금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유한 정치 자금 기부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하는 데 광분했고, 미국 정부는 13일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사태는 계속 악화됐다.

투기꾼들이 시스템의 약한 곳을 탐색해서 득을 보려고 하면서 사태가 악화

된 면도 있었다. 그런 표적의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 웃지 못할 스캔들로 곤욕을 치러 온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 은행이었다. 크레디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에게서 54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뒤, 경쟁사인 UBS에 인수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속도위반 결혼”으로 묘사한 이 인수 조치에도 금융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크레디스위스가 발행한 17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은행 채권의 보유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SVB의 구제는 가장 큰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투자자들과 예금주들은 중소 은행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소 은행들은 자신들도 보호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패닉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속 금리를 높이면 금융 시스템에 더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

번역 이원웅

출처 Alex Callinicos, “No easy way out from banking crisis”, (2023. 3. 20)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13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강동훈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부도 직전에 매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사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만 1727호에서 1년 만에 5만여 호나 더 늘어난 것이다.

전 세계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지만, 3월 22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퍼센트에 달하게 된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1.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린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주요 건설 회사 11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는 총 95조 원에 달했다. 반

면, 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은 12조 원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은 부채에 비해 현금 보유량이 적어 위험 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건설 회사들의 부실은 곧 금융 회사들의 부실로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PF는 은행보다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폭 늘어나 이 회사들도 위험에 처하게 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액은 2018년 말 94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91조 7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들은 은행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버틸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이들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사 연체율은 2021년 말 3.7퍼센트에서 지난해 9월에는 8.2퍼센트로 높아졌고, 저축은행은 1.2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보험사는 0.1퍼센트에서 0.4퍼센트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 준 부동산 PF가 급증했고, 대출 연체액 또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집값이 급락한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출을 대폭 늘려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

이처럼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정부는 제2금융권과 건설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초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건설사들과 금융회사들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수십조 원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권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금융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지는 않고 은행들을 동원해 대출을 연장해 주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나서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은 해외 금융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금융 불안정을 시인하는 신호가 돼, 외환위기나 정부 재정 위기의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무역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일까지 무역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48퍼센트나 됐다. 무역적자의 확대는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 미봉책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터질 수 있는 대형 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리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리는 서민층

3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상승했다.

또, 전체 가구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29.4퍼센트에서 올해 2월 34.5퍼센트로 높아졌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자 중 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비중이 15.3퍼센트나 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금리로 생계난을 겪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월세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지만 대출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개시하자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자율이 16퍼센트나 돼 정부가 고리대를 놓는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기업 금융 지원에는 수십조 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부가 서민 소액 대출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보면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난다.

당장 생계난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저리 대출을 대폭 늘리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에 맞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임금 인상을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우파 언론들은 이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 4명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와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요구와 반정부 선동은 훨씬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별히 북한과 관계될 이유가 없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대중국 군사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키울 동맹이므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친기업, 서방 제국주의 편들기, 민주적 권리 훼손 같은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므로, 반정부 정서도 매우 광범하다.

무엇보다, 이 4명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 방식으로 실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파 언론들이 “북한 지령” 운운하는 사안들이라는 게 실은 윤석열 정부를 위기에 빠뜨린 문제들이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었던 한일 강제동원 합의는 대중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의 다른 악행들(가령, 노동시간 연장 시도)에 대한 반감이 더해져 윤석열의 지지율은 또 떨어졌다. 부정 평가가 지지율의 곱절이다.

대중의 이런 분노는 북한과 연계돼 있는 소수 음모가들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험(역사적·일상적·투쟁적)에서 우리나라



‘간첩 수사’의 목표는 반윤석열 투쟁을 분열·약화시키는 것이다

것이다.

우파 언론의 이런 비방과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에서도 그 단체의 조직원 4명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7월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생계비 위기 악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주목을 끈 덕분에 연대가 광범하게 이뤄졌다. 이 파업으로 당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우파 언론들은 어떤 증거도 없이 북한 지령 정보를 “입수”해 보도한다. 마치 ‘간첩’ 혐의자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다. 이런 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들먹이는 것은 역겨운 이중 잣대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간첩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다.

석권호 조직국장의 부친 석달윤 씨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 1980년 전두환의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진도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석달윤 씨는 중앙정보부에 끌

려가 고문을 당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8년의 옥살이를 하고 1988년에 가석방됐다. 2009년 재심에서야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론 조작용

우파 언론의 이런 행태는 국가보안법 탄압의 본질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여론 조작을 위해 보안법을 휘두른다. 재판 전에 피고인을 공개 비난해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보안법 처벌의 목적은 교정이 아니고 급진적 반대파에 대한 보복과 통치 정당화 선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보안법을 특히 대중운동과 북한 국가를 엮는 일에 이용하고 있다. ‘간첩 수사’의 목표는 대중운동과 북한을 한통속으로 치부하게 함으로써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기 없는 정부다. 다양한 전선에서 반윤석열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간첩 수사’를 통해 현실에 불만을 품고 투쟁을 나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

이다.

이렇듯 보안법 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친서방 어젠다 관철 노력과,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이 빚어낸 긴장을 반영한다.

따라서 ‘간첩 수사’는 친북적인 일부 급진적 반대파에 국한된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이 ‘간첩노조’라는 점을 더붙어민주당도 좀 알아야 한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은 참모들에게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 하고 말했다고 한다(중앙일보) 3월 23일자).

정부·여당은 ‘간첩’을 반윤석열 투쟁의 코드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악명 높은 보안사

그런 말을 한 뒤 22일에 윤석열은 국군방첩사령부(옛 보안사, 기무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노태우 이후 31년 만이다.

방첩사령부는 사병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이 임무인 부대다. 1990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민간인(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 등)을 광범하게 사찰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수만 명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그 뒤 이미지 세탁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다가 박근혜 퇴진 운동 때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2018년에 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윤석열은 이 부대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인원과 조직을 보강했다.

윤석열의 방첩사 방문은 (국정원을 포함해) 정보·보안기관들을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삼아 저항을 억누르겠다는 정치 퍼포먼스다. 물론 실질적인 격려의 의미도 있다.

윤석열의 구상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치 탄압 대상자가 ‘간첩’ 혐의를 받을지라도 노동운동이 방어를 회피하지 않고 연대를 효과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파업 투쟁으로 조직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결정적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김인식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던 것이 모두 커다란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연장안은 일단 뒤로 미루는 꾀수를 부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해 난관을 벗어나려고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회복과 노동시간 연장이 모두 국익에 이롭고 특히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했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 전에, MZ세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지지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은 두 문제 모두에 크게 반발했다.

두 전선 모두에서 공세를 펼치기 어렵다고 본 윤석열은 주 69시간 방안을 일단 철회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칫 윤석열 퇴진 투쟁과 만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재명 기소는 정적 제거 시도일 뿐

검찰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과 성남FC 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최근 윤석열의 대일 외교를 맹공격해 왔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재명 공소장은 확증 제시가 없던 이전 구속영장과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을 새삼스럽게 증폭시켰던 이재명 대선 자금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석열과 검찰은 직접적 증거의 제시 없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하며, 정치적 경쟁자 압박에 검찰 기소 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야비한 압박에도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한일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 종교인 등이 윤석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좌파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를 위해 애국주의적 항의(“굴욕 외교”)나 총선 심판론에 머무는 것은 기회의 낭비다.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정서가 반제국주의,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참하고 특히 이를 노동자 투쟁들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책무다.

정치적 반대 세력 압박 강화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호 의존 증대 때문에 한국의 미국으로의 경도는 모순을 자아낼 것이다.

무역협회장 구자열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의 협력 공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순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에게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반대 세력

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려고 한다.

검찰은 민주노총 현직 간부들이 포함된 서울 지역 간첩단 혐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우파 언론들은 북한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 5면 기사를 보시오)

윤석열은 2월에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격려한 데 이어 3월 22일 국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방문했다. 윤석열은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고려

노동시간 연장 개악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사용자들의 불멘소리가 나왔지만, 그들 다수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5대 재벌 총수들이 윤석열의 방일에 동행했다.

윤석열의 대일 외교는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주미대사 조태용은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해법] 결정은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관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 강점 과거사를 덮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관련돼 있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질서의 유지에 기여해 이익을 얻겠다는 말이다.(▶ 관련 기사: 8면 기사를 보시오)

미·중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포위·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전선 구축(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일본 총리 기시다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도쿄에서 독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인도·우크라이나·폴란드 등을 연달아 방문했다. 시진핑이 푸틴과 만난 바로 그 시점에 말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는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지원해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고 활로를 찾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시급한 해결 과제였다.

미국은 이 과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특히 미국 중심의 새로운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압박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등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점점 더 유착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자각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에 대한 보답으로 기시다는 올해 5월 G7 회의에 윤석열을 공식 초청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연일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여 한국 지배자들을 달래고 있다. 6월에는 첨단 전력을 총동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삼성·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결정도 발표했다.

한국 지배계급의 핵심 부분들이 지지하는 대외 노선을 “굴욕 외교,” “매국,” “제2의 경술국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가 담론 이면에 있는 진정한 계급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한미일 지배계급들에 이로울지라도,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평범한 대중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 애국심이 아니라 계급적인 국제주의 관점에서 반대해야 한다.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우선, 윤석열이 배타적·적대적 민족주의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윤석열이야말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적극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이민자들이 부도덕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겼다.

특히,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사례를 부각시켰다.(그 중국인은 혈우병을 앓는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집권해서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개악안을 발표했다. 이 개악안은 단지 이주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축소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한 수단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이용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김은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중국인 투표권을 문제 삼았었다.

윤석열은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투표권 부여 대상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우파 언론들은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약 12만 명 중 80퍼센트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불순하다는 윤석열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은근히 조장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는 한일 양측 평범한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한다

윤석열이 이번 국무회의 발언에서 반일 감정 극복을 대통령의 책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한일 갈등 국면을 이용한 것을 겨냥한 말일 것이다.

물론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대한 많은 대중의 부정적 감정을 위선적으로 이용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위안부’·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외면하면서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빚어진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항일 투사 행세를 했다.

정치적 이용? 우파도 마찬가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뒤집고 사드를 배치해 버리는 등 한미 군사 공조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아쉽게도 당시 대다수 좌파는 일본 제품 대체를 위한 정의 결의를 하는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핑계로 추진한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연장에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일 감정을 정치적 위기 탈출용으로 사용한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김영삼은 집권 초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현안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가 1994년 급속히 지지율이 떨어지자, (일본 총리가 “한일합병은 정당하다”고 한 망언을 이용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

키고 국내에선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임기 초부터 노골적인 친미·친일 노선을 폈던 이명박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히는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2012년 갑자기 독도를 방문해 한일 관계를 경색시켰다.

국제주의

윤석열은 재일동포들이 한일 관계 경색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받는 차별은 일본의 과거 한국 강점 사실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된다면 가령 간토 대학살 같은 비극도 지워질 것이고 식민지 출신 재일동포를 비난하는 일본 우파의 사기도 더 오를 것이다.

윤석열은 중일 수교 당시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중국 전 총리 저우언라이의 말도 인용했다.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당시 전쟁 배상을 포기한 대가로 중국 관료는 일본과 대만의 단교와, 3조 6천억 엔에 이르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얻어냈다.

중소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상황에서 중국 지배 관료는 미국·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소련과의 분쟁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다.

이런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중국에서도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 등 전쟁 범죄 해결은 자국 지배자들에 의해서 무시된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실제 책임이 있는 일본 국가에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었다.

윤석열이 “일본 국민의 부담”을 운운하지만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노동자 등 서민 대중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라고 보고 잔결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 더 나아가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의 지배계급은 이에 발맞춰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이는 긴축을 강요하고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복지는 긴축을 하면서도 국방비는 늘렸다.

또한 제국주의 갈등의 한 전장이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려고 반도체 기업들에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려고도 한다. 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도 벌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만약 동아시아에서 실제 커다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심지어 미국의 평범한 청년들이 총알받이로 희생될 것이다.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것도 주로 1930년대 만주 침략 전쟁 확대로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갈등의 고조 국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 간 대결이 아니라 계급 분단선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노동계급에게는 각자 자국 정부의 전쟁 관여나 전쟁 노력에 반대해 국제주의적 연대를 도모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를 실행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한국 정부, 즉 윤석열의 서방(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다.

임준형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QR코드)의 발제문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음 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는 연장이 아닌 “종료 유예”라는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돼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한일 갈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제3자 변제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일본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십년 동안 싸워서 얻어낸 배상 판결을 정부가 외교적 해법이랍시고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참히 희생시키고는, 엿새 전인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해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가 당시 일본 총리 아베와 맺은 것입니다. 그 합의는 위안부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야 할 법적 배상을 위로금으로 대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측이 독도에 관한 논의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올 상반기 중에 강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싸워 오셨다

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 외교?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워 자국민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내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중 속에서 큰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친일파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내건 윤석열 퇴진 집회의 규모도 점점 커져, 가장 최근에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요 좌파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도 모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규탄 운동은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애국심이 아니라 반제국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주요 진보 세력 지도부들은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의 친일 정책이 “외교적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종속시킨다면서 말합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은 반면 한국은 전쟁 위험과 경제 파탄이라는 이중고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에 근거해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주장은, 좋은 정부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익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사를 돌아보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 맺힌 외

침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에 밀려 항상 짓밟히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과 그를 승계한 우파 정부들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그 일부였습니다.

왜 과거사 문제는 이토록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하고 외면당해 온 걸까요?

역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국가적 한일관계를 우선해 온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때 식민지-피식민지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후원하에 경제적 및 지정학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착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굴욕 외교” 비판하는 민주당·노동계 정당 지도자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



이정미 정의당 대표

“외교적 자율성 포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우리가 얻은 국익은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고 기뻐하는 윤석열과 기시다

그 역사는 단지 양국간 관계를 넘어 서방 제국주의가 전개돼 온 더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일본과 한국을 동맹으로 삼아 경쟁 상대를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 속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한일협정의 배경과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1960년대 초 이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당시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삼았는데,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한국 전쟁 특수(特需) 덕분에 연합군 군정 중

식(1952년) 이후 10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일에 한국이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대소련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로서 이 동맹 질서에 편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확립되려면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했습니다. 두 국가가 하루빨리 전후 배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국교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자본 축적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경제 개발 자금 저리 대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의 희망에 호응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그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 미국은 제3의 당사국이라고 할 만큼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는 일본이 경제개발 자금을 저리 대출해 주는 대가로 강제 동원 등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주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박정희 정부도 한일협정으로 건네진 돈을 피해자들의 청구권 몫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에서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중 겨우 5.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경제 성장이 사활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엄청난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원조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일 동맹 질서에 편입되면서 경제 성장, 즉 자본 축적을 구가했습니다.

식민 지배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혈값에 불과했지만, 당시 8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개발 자금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고작 2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한국의 재벌들은 일본의 차관과 기술에 힘입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두 나라 정부와 기업주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긴밀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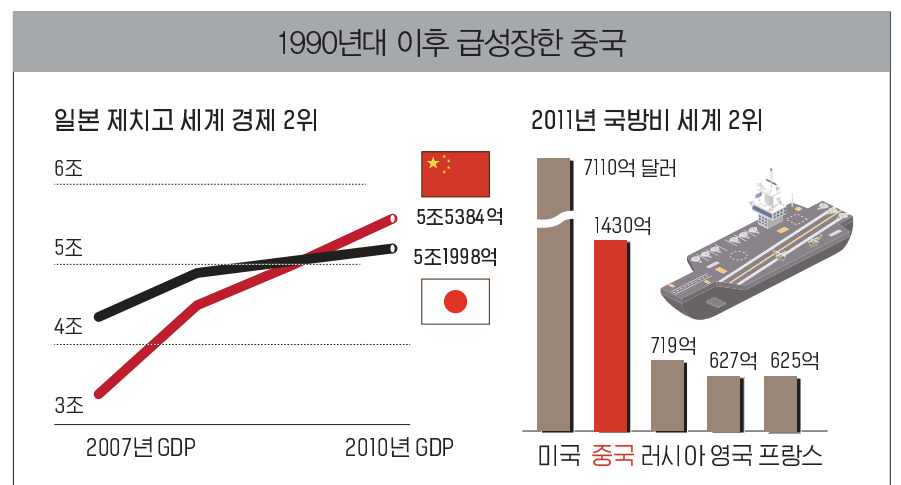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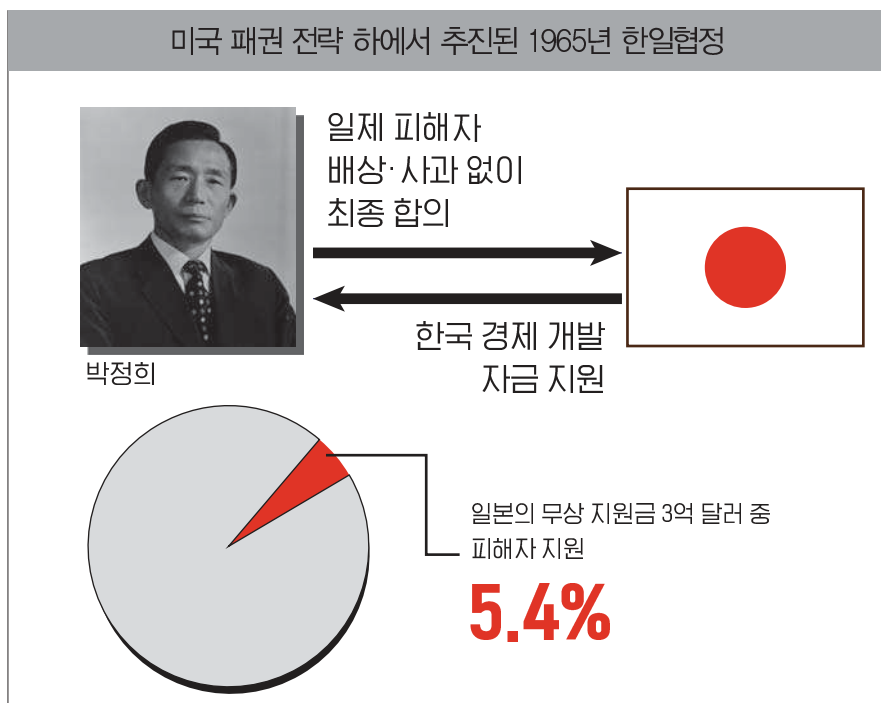
이렇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한·미·일 지배계급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형성하고 규정한 기초가 됐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1990년 이후 세계 질서는 또 새로운 구도로 변했습니다. 옛 소련 블록이 붕괴한 것입니다. 미국이 냉전의 승리가 돼 세계적 패권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거듭 피해자들 가슴에 못을 박는 방식으로



국익 관점에서 국민 위해 내린 결론



뒤틀린 배경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0년대부터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에 올라섰고,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해 2011년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독보적인 세계 패권을 과시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드는 동시에, 아시아의 최강대국이던 일본의 위기감을 특히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세력 관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2010년대 초부터 대외 정책을 변경해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맹을 재구축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일본 지배계급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공격형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약을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 방위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아시아 전체의 38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과 작전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인데,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였습니다.

그 즈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법제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전쟁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 없게 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재무장 강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미화 프로젝트도 강화했습니다. 2015년 8월, 당시 총리 아베 신조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해 "전쟁 이전의 강한 일본을 되찾자"고 천명했습니다. 침략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재현해야 할 영광"이고 아시아에 이로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을 옮기며 동맹 재구축으로 나아가던 2011년, 마침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피해 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과거

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현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 곤란한 역사 문제의 해결을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과거사가 동아시아 동맹 재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박근혜와 아베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1년 한국 헌재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반동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서둘러 선언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번 강제동원 합의 직후 한밤중에 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극찬했는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체의 이익("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는 일본이나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산업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의식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더욱 협조하는 식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북한

의 미사일 발사가 교차하는 등 긴장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전통적 동맹인 미국·일본의 더 밀접한 동맹이 돼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윤석열의 외교를 그저 굴욕과 무능으로 여기면,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친제국주의적 성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지게 됩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세계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 국가 체제를 문제삼지 않고 그저 외교의 대등함과 자주성만 문제삼아서는 문제가 조금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심지어 거리 집회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는 그들과 공동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운동의 지평과 전망, 요구와 투쟁 수위, 전술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의 핵심은 필요한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한일 합의 배후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후원과 압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점은 맹렬하게 비판해도, 일본의 제국주의와 단절할 생각 자체는 그들에게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에게 낙점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일본 외교도 배신적이었거나 배신에 가까운 기회주의였다는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진보적 애국주의 운동은 문재인하에서 그랬듯이 정부에 협조하고 심지어 애국적 쟁의 자체를 결의할 것입니까?

애국주의적 접근은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친제국주의적 성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

이제 애국주의적 접근은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이 보통의 한국인들의 이익이 아니듯이,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도 보통의 일본인들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 지배자들이 미화하는 과거 제국의 역사 중에는 일본 노동자들이 전쟁의 전방과 후방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가혹하게 착취당한 역사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노동계급입니다.

한일 노동자들이 한일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협력과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고 대중 운동을 벌여 한일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들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 노동계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카를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토론회 시청자 발언과 정리발언도 포함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미국의 악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발표했고, 국회는 침공 2주 만인 4월 3일 파병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렇게 창설된 자이툰 부대는 2004년 2월 23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파병됐는데, 그 규모가 3800여 명으로 점령군 중 미군과 영국군 다음으로 컸다.

파병의 명목은 “평화 유지”와 “재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 부대가 “재건 활동 중심의 비전투 부대”라며 파병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미국의 원활한 점령을 도우며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일조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민주주의” 따위의 구호를 내세웠지만 이라크인들은 처음부터 그 위선에 속지 않았다. 이후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변했다.

2003년 11월 이라크에서 시행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라크인의 80.1퍼센트가 한국군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마찬가지로 미국을 돕는 일일 뿐”이라며 반대한 사람도 54.5퍼센트나 됐다.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된다?

한국 정부는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했다.

당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 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들어주면 대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다.

게다가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하건 말건 노무현에게도 우선순위는 한미동맹이었다. 당시 노무현의 비



2003년 3월 22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대

서실장이던 문재인은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국가 경영을 모르는 진보·좌파들이나 파병을 반대했다.”

물론 미국 정부에게 북한 문제는 자국의 패권 증진에 이용할 장기말이나 다름 없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했다.

이라크 침공은 북한 관료들의 두려움을 자극했고,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이 성공했다. 그러나 북핵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인들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던 것이다.

기업의 이익 챙기기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점령 후 이라크의 석유 개발권을 따내며 막대한 이익을 쏙어 담았다.

한국군 파병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도 있었다.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안중에는 평범한 이라크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의료 문제는 없었다.

한국 기업주들도 전후 재건 사업에서 이익을 챙기려 군침을 흘렸다. 2003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 기업인 71.4퍼센트가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에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참여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이라크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렸다. 2003년 11월 미국 기업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김만수 씨와 광경해 씨가 피살됐다. 2004년 6월에는 군납 업체 노동자 김선일 씨가 납치 살해됐다.

전쟁 반대

노무현 정부는 파병 비용으로 무려 7238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가 공언한 평화는 한반도에도, 이라크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철저한 파괴와 인권 유린으로 점철됐다. 이라크인 100만 명이 미국의 침공과 뒤이은 점령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이전 경제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십만 명을 빼고도 그렇다.

이라크 전쟁 개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라크인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한때 중동

에서 공공의료 제도가 가장 발달했던 이라크는 이제 700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물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다.

노무현과 그의 비서실장 문재인은 온갖 미사여구로 전쟁과 파병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제국주의 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재앙이자 아만이다.

진정한 평화는 자국 정부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이랑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최무영 교수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 ★ 국민연금 개혁 시도와 좌파의 대응
-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안과 기후 운동
- ★ 외국인보호소 무기 구금 위헌 판결
- ★ 러시아인 난민 인정 요구 단식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신정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외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차별을 방치하며 저임금 체계를 평생 유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기만이자 허구”라고 꼬집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과 교섭을 해 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들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비용을 핑계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도 보수교육감 뒤에 서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신학기 파업(3월 31일)을 예고한 이유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월 기본급은 186만 8000원(행정 대체 직종), 206만 8000원(교원 대체 직종)에 불과하다. 이 액수는 올해 최저임금(201만 원)보다 낮거나 약간 높을 뿐이다.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공무원·교사와 비교해 봐도,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60~7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속이 쌓일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물가 인상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1.7퍼센트)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복리후생 수당

들(명절휴가비,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항목과 금액 모든 면에서 적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조차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역대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를 외면해 왔다.

임금체계 개편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는 차별을 정당화할 뿐이다.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직무가치를 낮게 평가해 계속 낮은 임금에 묶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비정규직 직무급제 모델 ‘표준임금제’가 딱 그랬다.

더구나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을 임금 등 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적 저항이 아니라, 개별 직무 평가와 성과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단결을 약화시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처럼) 근속에 따라 매년 임금이 파박파박 인상되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통합한 단일기본급체계 도입을 전면내 걸었다. 일종의 호봉제 임금체계로, 직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현재의 임금체계를 단일하게 상향평준화하라는 것이다.

최근 노동시간 개악 등 윤석열 표 노동개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일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도 끓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국면을 활용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 싸워 나가길 응원한다.

급식실·돌봄교실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학생들 밥을 짓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처우, 위험한 작업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급식실 특성상 노동자들은 각종 튀김·볶음·구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조리흡)에 노출된다. 2020년 학교 급식실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됐다.

최근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은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 인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50대 후반을 기준으로 최소 4.9배~최고 16.9배).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필수인데, 정부와 교육청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에도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 1명당 식수 인원이 국립대병원, 군대 등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2~3배나 된다. 이렇게 노동강도가 높으면 호흡수

가 상승해 유해 물질에 의한 악영향도 커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돌봄교실을 확대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돌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학교들에서 시범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 계획은 매우 부실하다.

현재 전국의 돌봄전담사 1만 6360명 중 75.6퍼센트인 1만 2360명이 시간

제로 일한다. 노동자들은 돌봄교실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필요한 예산 확충을 꺼리고 있다.

인력 확충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자원봉사자나 은퇴자 등 불안정한 임시인력 충원에 불과하다. 이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린다.

급식·돌봄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박설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 측은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부안은 노사 선택권, 휴식권 보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주장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주일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언을 뒤집으면서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이 주 60시간 상한제를 제시했다가, 노동부 장관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다.

결국 3월 21일 윤석열은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파렴치한 정당성 주장과



만성으로 수준까지 장시간 일 시키겠다면서 노동시간 “선택권”, “건강권”?

함께 노동시간에 관한 “혼선”을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60시간 이상은 (노동자들의) 건강상 무리다.”

이는 단지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의 소통 부족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면서도 대중적 반대 여론도 눈치 봐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난처한 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윤석열이 다종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강하게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올해 1호 개악 법안으로 노동시간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인즉,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몰아쳐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삭감하기였다.

이는 곧바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게다가 지금은 한·일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큰 시점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일본 정부에 굴욕적으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더 확고히 해 한국 지배계급의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짓밟는 것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한층 불안정과 긴장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노동시간 개악 추진과도 맞물려 정부 지지율이 다시 3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철옹성이기는커녕 정치적으로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장시간 노동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쌓아온 뜨거운 감자다. 최근 ‘사람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91.5퍼센트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휴무 없이 노동시간만 길어질 것이라는 이유였다. “(장시간 노동) 프레임을 바꾸지 못하면 근로시간 개혁 실패”(《한국경제》)라는 걱정이 지배자들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기휴가 등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에 적합하다고 내세웠지만, 이런 이간질 시도도 먹이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청년들은 정부 개악안이 하루하루 녹초가 되고 여가는 포기해야 하는 ‘기절시간표’일 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제 하에서 압축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임금마저 삭감된다는 점도 불만의 대상이다.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위기 속에 청년들의 삶도 고달프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직무성과급제를 선호한다는 흔한 주장과 달리, 최근 ‘MZ노조’ 안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이 강한 반대에 밀려 허둥지둥 대고 있는 지금이 싸울 기회다.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꿈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 현행 고시로 봐도 12주 평균 주 60시간을 일하면 만성과로이다.

게다가 윤석열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보상, 휴가 보완책을 강조한 점을 보면 포장만 약간 바꾼 개악안 유지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정부·여당 안에서는 “프레임 바꾸기”에 주력하자거나 주

당 노동시간 총량 규제를 없애자는 등의 주장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주 60시간 꿈수를 경계해야 할 이유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바람은 장시간 유연 노동이 아니라, 실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시간은 평균 36.7시간이었다. 20대는 35시간을, 30대는 36시간을 원했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는 20~30대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도 장시간 일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노동시간 문제에 상당히 민감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점을 의식해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악안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 시행을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를 공약했다가 “장차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주 52시간제조차 무력화하려고 시도해 온 점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을 보여 준다.

사실 노동운동 안에서도 개혁주의

지도자들이나 진보적 학자 일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유연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로 여성들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양육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시간 선택권은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고, 사용자들은 싼값에 여성 노동력을 쓰는 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저임금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 것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유연화, 강도 강화 등)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초청됐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부 중 하나인 폴란드의 극우 대통령 안제이 두다도 또 초청됐다. 둘 모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매우 협조적인 정상들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또다시 초청됐다. 필리핀의 새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도 초청됐는데, 그는 악명 높은 두테르테 정권의 계승자로 친아버지인 마르코스의 독재를 찬양하는 자다. 두 인물 모두 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대(對)중국 경쟁에 인도와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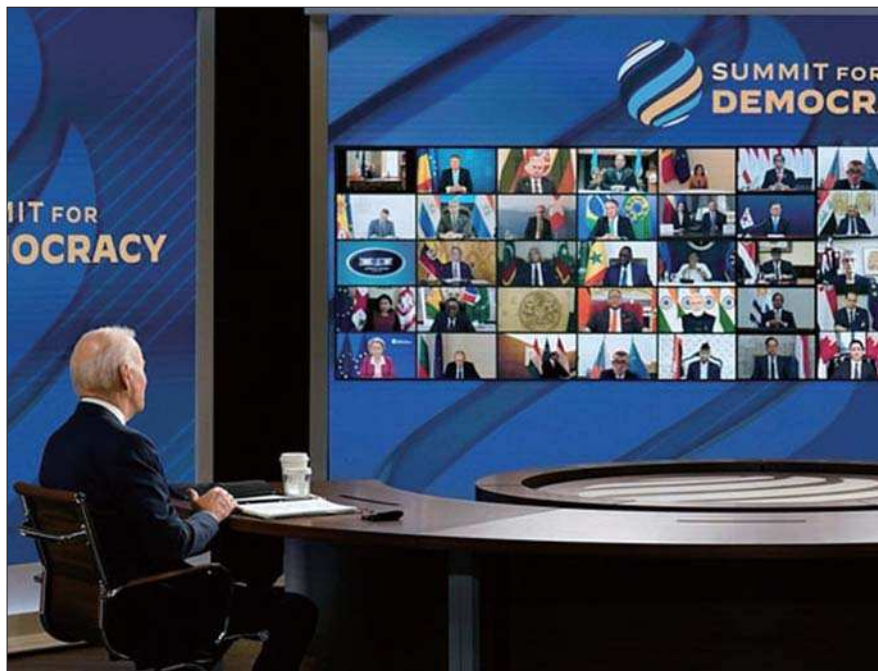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이 자국에 반하는 국가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비민주성을 눈감아 준 사례는 허다하다. 한국 독재 정부들에게 그러했다. 1973년 칠레에서처럼, 미국 자신이 우익 군사 쿠데타를 지원·조직한 사례도 많다.

이번에 초청국 명단을 짤 때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자국의 이해관계였다. 예컨대 미국은, 최근 중국과 정식 수교한 온두라스 새 정부를 초청국 명단에 재빨리 추가했다. 회유하려는 의도일 테다.

미국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다.

미국은 아예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첫 번째 세션 주제로 잡고 젤렌스키에게 연설 기회를 줬다.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 직접 이 세션을 주재한다. 이는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동맹들을 결집시킨 것의 연장이다.

한편, 미국은 자신이 주관하는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첨단 기술 생태계를 민주주의·인권 원칙에 따라 구성할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 협조할 국가들을 모으려 한다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대만 디지털 장관에게 특별 발언 기회를 줬다. 미중 갈등의 핵심적 일부인 반도체 경쟁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을 공동 주최국에 포함시키고 인도-태평양 세션을 주관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등 미국의 패권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션의 주제는 공교롭게도 반(反)부패다. 온갖 부패와 특권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가 부패 근절의 모범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형법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억압, 정부 부패 등의 사안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문제시하는 표현을 넣었다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비공식 항의를 받고) 슬그머니 삭제했다.

부패 관련 지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이 중국·러시아 등의 권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부패는 그저 덜 노골적 형태를 취할 뿐이다. 선진국들에도 만연한 회전문 인사나 어마어마한 미국 로비 산업의 규모가 단적인 사례다.

한편, 반(反)부패라는 세션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션이 시작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동 행동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모델이 우월하

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것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집단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집단 행동”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은 이 회의의 공동 주최자로 나서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중국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월 20일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를 민주 대 비민주 진영으로 갈라 놓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인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지 다른 소수 국가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 …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불평했다.

국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과 행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소수민족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중국이 중국식 민주

주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중국이 하고자 하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다.

3월 15일 시진핑은 “중국은 서로 다른 문명의 가치와 의미를 포용한다”고 공언했다(“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외교 상대국이 기본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든 말든 중국은 개의치 않고 우호적으로 지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에 맞서 우호국들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당근책인 것이다.

이를 보고 중국은 내정 불간섭과 상호 호혜에 기반한 포용적 외교 정책을 편다는 일각의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다. 이미 2010년대부터 중국은 경제력·군사력을 모두 동원한 “늑대전사 외교”를 펴며 “자국의 핵심 이익을 두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시진핑)임을 분명히 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인 것이 현실”(전 외교부장 양제츠)인데 “소국이 대국을 거슬러서야 되겠느냐”(전 외교부 부국장 천하이)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

요컨대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중국이 내세우는 ‘다양한 문명의 가치’는 서로에 대한 경쟁을 포장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미국의 민주주의 운운이 위선일 뿐 아니라, 반대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다국화 질서가 되는 것이 미국 패권 질서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틀린 이유다.

두 나라 간 갈등은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우위를 다투는 것이다. 양측 누구를 편들 게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그중 미국 편을 지원해 득을 보려는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게 중요하다.

김준호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미·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무기 지원을 약속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시진핑은 푸틴에게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푸틴은 중국이 제안한 ‘평화 계획’을 지지했다. 중국의 중재안은 현재까지 러시아가 확보한 점령지를 인정한 채 전쟁을 멈추자는 방안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이 제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의 주요 행위자가 되려 한다.

푸틴이 시진핑에게 계획을 알려 주지도 않은 채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기에 여러 면에서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중국은 서방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상황에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편들다 제재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해 왔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맞서게 하는 데 이 전쟁을 톡톡히 활용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데서 우군이 될 수 있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러시아가 전시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

중국은 ‘평화 계획’ 제안을 통해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국제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이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그리고 서방이 확고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서방 정부들은 중국의 제안을 중립을 가장한 러시아 편들기라고 간단하게 기각한다. 그러나 그런 서방 정부들도 푸틴과의 회담을 마친 시진핑이 젤렌스키와도 대화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런 대화가 성사된다면 중국의 메시지는 바이든을 향한 것이 될 것이다. 3월 20일 한 중국 고위 관료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다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사용자와 지방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암흑 속에서 지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시설은 전력 차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수력 발전 댐 노동자들은 전력망 전체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방법을 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밀란 부슈워론의 전력 노동자



정상회담 후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 미·중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치열한 외교전의 일부다

게 말했다.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이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다.”

새로운 봄철 공세

중국이 서방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에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했다. 거기서 시진핑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 온 푸틴을 겨냥한 메시지였지만, 그와 동시에 푸틴이 핵무기를 쓸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바이든에게 던진 메시지가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중재에 성공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재 이전부터 이미 서로 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봄철 새

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지도자들이 내놓는 제안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이 아니라 자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평화 계획’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향후 미국과 벌일 대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편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서방 또한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진핑과 푸틴이 회담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에이브람스 탱크 지원 일정을 훨씬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영국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장착한 첼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이든 동방이든 제국주의자들의 외교는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전쟁에 더 부채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원웅

▶ 16면에서 이어짐

시킬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죠. 그러나 투쟁 기금을 모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을 더 급격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3월 21일에 우리는 “에너지 근접 절약”의 날을 정했습니다. 표적 단전을 하는 날이죠.

다른 노동자들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툴롱에서는 군사 기지와 의회, 대기업 건물로 가는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를 논의에 부쳤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만큼 논의가 더욱 광범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용자와 지방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암흑 속에서 지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시설은 전력 차단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수력 발전 댐 노동자들은 전력망 전체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방법을 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밀란 부슈워론의 전력 노동자

학생들이 연대를 건설하다

“우리는 지난주 대규모 학생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파리 외에도 캉과 뮈, 루앙, 낭트 등지의 31개 대학의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위, 봉쇄, 파업에 대한 청년들의 전폭적이고 단결된 지지를 결의하고 모든 곳에서 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노동자들을 접촉하고 대규모 학생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투쟁에 뛰어드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파업 대체 인력

투입 금지 행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찰과의 대치가 격렬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에게 연설했지만, 저는 오로지 노동자들 자신만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학생 집회는 단지 연금 개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폭력과 탄압, 인종차별, 성차별,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 맞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크롱이 비민주적으로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것은 사람들을 냉소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제이드 파리의 한 대학생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찰리 김버

정치적 위기가 확대되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투쟁을 키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파업을 키우기 위해 결집하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본지는 시사각각 변화하는 프랑스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 마크롱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법안의 하원 통과를 장담할 만큼 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민주주의 유린은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촉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만만찮은 도전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파업을 연기했지만 기층 활동가들은 행동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과 도(道) 수준의 노조 대의원들이 기층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래 사례들은 기층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과정의 극히 일부를 보여 줄 뿐이다.

3월 7일부터 야간 근무 파업을 벌이며 거리로 나온 노르망디 정유소 노동자들은 헌법 49조 3항이 발동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노르망디 정유소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정유소이다. 파업 참가자 라파

엘은 이렇게 말했다. “아슬아슬한 투표였습니다. 우리만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번 개악이 프랑스의 평범한 사람들을 완전히 억신여기는 처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금 개악 강행만으로도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회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 맞서 싸울 기회가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 집회에서는 세세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봐요. 사람들은 자신이 계급의 일원임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의 살림살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마르세유 인근에 있는 페트로이니오스 드라베라 정유소의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대의원 세바스티앙 바라놀은 이렇게 말했다. “연료 수송이 멈췄고, 우리는 3월 20일 늦은 시간부터 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파리, 리옹, 툴루즈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주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낭트의 생활 폐기물 청소 노동자들도 모여서 헌법 49조 3항 발동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일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3월 16일 연금 집회.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강행했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임을 선언하고 이번 주까지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생브리의 생활 폐기물 청소 노동자들도 이번 주 내내 파업을 하는 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가능한 곳들”에서 파업하겠다고 선언하는데 그쳤지만, 몇몇 노조들은 이번 주 주요 시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행동에 나섰다.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마크롱 정부 불신임안 투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다. 프랑스 전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3월 23일 공식 파업 일정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도 추진하고 있다.

번역 김미령

출처 Charlie Kimber, “Workers in France have organised to beat Macron”, (2023. 3. 21)

전력 노동자들의 투쟁

“우리 투쟁은 대중적 총회에서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우리는 행동을 지속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들이 겪는 일터의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회합 없이는 파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도부가 호소문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쟁에 계속 동참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모금을 조직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투쟁을 지속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민족과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한일 강제동원 합의를 계기로 살펴봅니다

3월 29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32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